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2월 12일(수) 16시 : 연구원 사무국 주간회의
- 2월 14일(목) 16시 : 마을기록화 2차 출판회의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회원의 날 안내

오는 3월 29일(토)~ 30일(일), 이틀에 걸쳐 연구원 회원의 날이 열립니다. 앞서 안내 드린 것처럼 앞으로 회원의 날은 개원기념식과 분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회원의 날은 그간 회원의 날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되었던 숙소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충남 공주에 자리한 계룡산에서 개최됩니다. 회원의 날 장소는 동학산장호텔 (<http://www.dhsanjang.co.kr/>) 로 참가하시는 모든 회원이 편안한 숙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회원의 날을 통해 회원은 연구원 사업의 경과와 전망을 이해하고 연구원은 특별 강좌를 비롯한 여러 행사로 회원 연대와 소속감 증진에 그 목적을 두도 있습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호남을 벗어나 열리는 2025년 회원의 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신간회 창립 - 1927. 2. 15.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에 자극받아 국내에 있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공주의 진영은 민족유일당운동을 조직했다. 이 운동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신간회가 90년 전 오늘 서울에서 그 깃발을 올렸다.

1926년 말 태동기 원안의 이름은 신간회가 아니라 신한회(新韓會)였다.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결사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가 허가하지 않자 신간회(고목에서 새 가지가 솟는다는 뜻의 '新幹出古木'에서 유래)로 개명했다. 1927년 1월 19일 신간회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된 3항의 강령도 원래 초안은

- I. 조선민족의 정치경제의 궁극적 해결을 도모한다.
- I. 민족적 단결을 견고하게 한다.
- I. 타협주의를 부인한다.

였으나 단체등록허가과정에서 '조선민족'이 '우리'로 '궁극적 해결을 도모한다'가 '각성을 촉진한다'로 '민족적 단결'이 '우리는 단결'로 '타협주의' 부인이 '기회주의' 부인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당시 민인들은 당시 민중은 '기회주의 일체 부인'이란 항목에서는 자치론자를 떠올렸고, 정치적 각성 등의 문구에서는 민족 독립을 떠올렸다고 한다.

단체 결성 후 얼마간 일제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신간회 결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산발적으로 일어날 민족운동이라면 오히려 한 군데로 모아놓는 것이 감시하기에 편리하다는 점, 신간회 역시 다른 운동단체처럼 내분으로 무너질 것이며 그럴 경우 민족운동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급속하게 번진 전국적 활동에 크게 당황했다. 신간회는 표면적으로 중앙집행부를 장악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쥐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40여 개에 이르는 지방조직의 회원 상당수는 사회주의자로서 노동·농민·청년 운동조직의 구성원이었다. 그 때문에 일제는 1928년 2월 열릴 예정인 정기대회를 금지했다. 이 대회에서 지역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의안들이 토론될 예정이었다. 일제가 내건 금지 이유는 "반항적 기운을 선도하고 민족적 반감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신간회 지회는 일제의 탄압을 대중투쟁으로 철회시키는 비타협적·전투적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족주의 좌파가 장악한 신간회 중앙본부는 '온건화' 노선을 택했는데 총독부가 "신간회에 가입돼 있는 <조선일보> 사원 전원이 탈퇴할 경우 복간을 허락하겠다"는 제안에 경도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29년에도 정기대회가 불허되자 신간회 각 지부는 1929년 6월 인근 지역대표의 대표를 뽑는 '복(複)대표대회'를 열어 새 임원을 뽑고 새 규약을 채택했다. 창립 당시와는 달리 상향식으로 모인 의견의 결과는 반수 가까운 사회주의자가 간부로 뽑히고, 역시 사회주의자인 허헌이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인 허헌 체제는 일제 탄압을 더욱 심하게 받았다. 이에 더해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전국적 대중운동으로 고양시키려했던 '민중대회사건'을 계기로 조직 전체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민중대회 전 이를 파악한 일제 경찰은 일제히 주요 관계자를 검거했다. 이 사건으로 허헌을 비롯한 신간회의 지도급 인사 44명과 조선청년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등 사회운동 관계자 47명이 체포되었다. 대규모 검거 이후 신간회는 회원 수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조직의 세가 확대되는 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부였다. 새로 집행위원장이 된 김병로가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모색하는 등 타협적인 노선으로 기운 것이다. 김병로는 최린·송진우 등 자치론자들과 함께 신간회를 자치운동의 매개조직으로 삼으려 했고, 당연히 지방의 지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타협적인 지도부의 등장은 신간회 해소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조직은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해소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30년 부산지회를 통해서였다. 그러자 다른 지회에서도 해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신간회는 1931년 5월, 창립대회 이후 최초로 열린 전체대회를 통해 찬성 43, 반대 3, 기권 30으로 해소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후 새 단체 조직을 안건으로 해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제 경찰의 강압으로 신간회는 완전한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간회 해소 이후 민족주의 세력은 시련의 길로 들어섰다. 민족주의 진영 대부분이 1930년대 본격적인 친일로 들어섰다. 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 인사들은 이후 더 이상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개인적 차원의 저항에 그치고 말았다. 사회주의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신간회에 참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던 '합법 공간을 통한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를 스스로 차버리는 실기를 저지르고 말았다. 사회주의자는 지하로 들어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역사에서 가정만큼 부질없는 고민은 없겠지만 만일 신간회가 해체된 후에도 반합법적인 '민족협동전선'으로 남았더라면 우리 현대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주체적인 독립운동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2천만 민인들이 자주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시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벼락처럼 갑자기 찾아온 8·15 해방을 준비없이 맞이한 민인들은 7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더욱 아쉬울 따름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명제에 동의하지만 역사가 '재연'되는 것은 솔하게 목격했기에 97년 전 민족 단일대오로 일제에 맞서 새 시대를 열고자했던 신간회 건설과 해소과정이 던지는 교훈을 기억해야 할 책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